전두환 손자, 광주 찾아 전두환 대신 사과하나

전우원씨 28일 입국 항공권 올리며 "곧바로 광주에 가서 사죄하겠다"
전씨 일가 첫 사죄될지 주목…약물 파문에 진정성 있는 행동 촉구도
5·18 관계자들 환영 속 "폭로 내용 구체적 증거 제시로 진실 규명해야"

전두환씨를 학살자로 규정한 전씨의 손자 전우원(27)씨가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광주를 찾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밝혀 광주 학살 주범으로 꼽히는 전두환씨의 직계가족 중 첫 사죄 사례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5·18 관계자들은 전씨의 사죄를 환영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려면 그가 폭로한 내용들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27일 미국 뉴욕공항을 떠나 2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는 내용의 항공권 예약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한대로 비행기에 오른다면 전씨는 오는 28일 새벽 5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한국에 도착한 뒤 정부 기관에 의해 바로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짐만 풀고 5·18 유가족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광주행 의사를 밝혔다.

노태우씨의 직계가족인 노재헌(58)씨가 지난 2019년부터 광주를 찾아 아버지 대신 사죄를 했던 행보 이후 가해자 직계가족이 사죄의 뜻을 밝힌 적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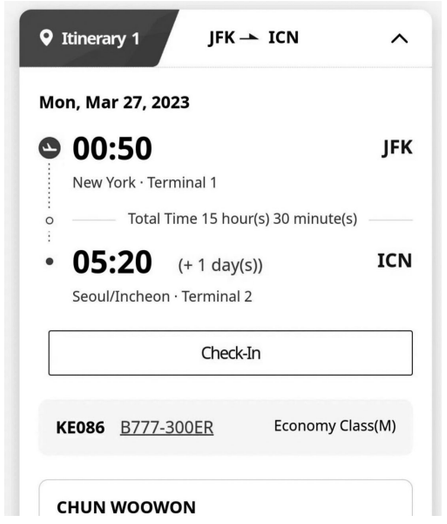
다른 게시들에서 전씨는 "아는 게 하나 없고 어디로 가야 유가족분을 뵐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5·18기념문화센터 말고 다른 곳에 가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또 "광주에 갔을 때 한 맺힌 광주시민들에게 죄를 사할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벌이든 받겠다"면서 "변명하지 않고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두환씨와 그의 직계가족은 그동안 5·18에 대해 관련성이 없다면서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사죄를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전씨의 사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도 있다. 지난 17일 전씨가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한 뒤 환각증세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전씨가 그동안 폭로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다.

전씨는 자신의 SNS계정에 광주 방문 일정을 올렸을 뿐 아직 5·18기념재단이나 공법단체에 직접적으로 방문 의사를 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우원씨가 26일 본인의 SNS계정에 올린 한국행 항공권. 〈SNS캡쳐〉

5·18재단 관계자는 "아직 연락을 받은 적은 없지만, 직접 방문하면 언제든지 만나겠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와 5월 단체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광주행 소식을 접한 5월 관계자들은 사죄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황일봉 5·18민주유공자 부상자회장은 "전두환씨가 사망했지만 손자가 사과를 하러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 "모든 회원들과 따뜻하게 맞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씨에게 사죄에 따른 진정성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노태우씨 아들 재헌씨가 수차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등 광주행을 거듭하면서도 5월 단체 등이 요구한 노태우씨의 회고록 수정 요구를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씨의 이번 광주행도 보여주기식 사죄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동안 폭로한 내용들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용기있게 가족의 비리를 밝히고 광주를 찾아 사죄를 한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환영하지만, 전씨의 사죄를 진정성 있게 받아 들이려면 그동안 폭로했던 내용의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27일 유족회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사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고개를 숙이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면서 "1980년 당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밝힌다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전씨의 마약 추정 약품 투약 의혹과 관련에 내사에 착수한만큼 입국후 전씨에 대한 신병확보 조치가 취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 4명 미쓰비시 국내자산 특허권 압류 신청

박해옥 할머니 유족도 3자변제 거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2명은 유가족)이 전범기업 국내자산에 대해 추가 강제집행(가집행) 절차를 시작했다.

이와는 별개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이어 지난해 고인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 유족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보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영수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지난 24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에 대해 '특허권 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압류 및 강제매각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된 손해배상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쳐 총 6억8700여만 원이다.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측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들 사건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이후 대법원에서 4년 넘게 계류 중이다.

원고들은 1심에서 승소와 함께 배상금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사건(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등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집행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해 양 할머니 등의 대법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차 가해국인 일본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미룰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시민모임측의 설명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삼권분립과 법치국가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사법부다. 이제는 대법원이 침묵하면 안된다"면서 "민주정치의 원칙인 삼권분립에 의거해 대법원이 자신의 본분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교육 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부 규탄 광주교육대학교를 비롯해 8개 교육대학·3개 대학의 초등교육과·8개 대학의 사범대학 학생 1500여명으로 이뤄진 '전국예비교사분노의연대체'는 26일 서울시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교육부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제공〉

기강 풀린 전남도 공무원 잇단 비위 의혹 전수조사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부정 청탁, 성 비위, 공금 유용 등의 잇단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직원이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는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남도 감사관실 주도로 모든 실·국·과의 사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작됐다.

앞서, 감사실은 사무관리비로 공용 행정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가정용품까지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도청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다.

감사관실은 해당 공무원의 구매 내역을 토대로 스마트 워치, 명품 넥타이, 가정용 청소기, 경량 패딩, 카드지갑, 여행용 가방 등 상품의 사용처를 확인한 뒤 사무관리비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또 이번 의혹을 계기로 도청 내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지 전수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금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면서 "예산 사용의 적정여부, 공직기강을 다잡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조만간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월호 보존 장소 옮긴다

호남권생물자원관 앞바다 매립 이전

영구보존하기로 한 세월호 선체가 기존 계획된 목포 신항만 배후부지에서 500여m 옮겨지게 됐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 대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애초 신항만 배후부지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세월호 선체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앞 바다를 매립해 옮기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진단이 계획을 수정한 이유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들이 세월호를 방문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 동선이 짧은 위치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모·기억 및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세월호생명기억관(파손선체 원형보존 및 복합관 조성)'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해수부 측은 오는 5월 중에 '공유수면 매립' 절차를 진행하고 7월에는 '법정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선체 원형 보존 장소 변경에 따라 최종 용역보고서가 발표 되는 9월 중에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시공 입찰, 턴키(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도맡는 것) 발주 등을 진행한 뒤 선체 이전과 안전교육·체험 복합관 공사를 거칠 예정이다.

추진단은 매립비용 포함 총 2117억 원을 투입해 이전과 원형보존 작업까지 끝내고 최종 준공 시점은 2029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